

+ 오경근 · MBC 기술관리국 국장

방통융합 유감



먼저, 현실성은 현실 또는 현장을 소홀히 한 미래 청사진이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상식을 되새기자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오늘의 방통융합의 청사진을 그린 주역들은 주로 학자와 통신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이었다. 그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었겠지만 방송계의 현장과 방송 산업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시청자의 요구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린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새해의 첫 걸음 치고 이렇게 무거운 적이 있었던가? 계속 내려가는 방송의 위상, 글로벌 경제 위기, 방통융합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 등 버거운 짐들이 우리 방송계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밀려 왔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버거운 짐들이 어떤 거대한 흐름들에 의해 떠밀려 왔지만, 현재 방송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방통융합 이슈를 들여다보면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디어관련법 파동으로까지 발전한 방통융합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무렵에는 사실 '엄청난 파급효과' 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키워드로 한 무지갯빛 청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기대감 또는 두려움으로 조금은 흥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해져 간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기대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콘텐츠와 서비스의 창출, 이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와 시청자 만족, 이는 다시 새로운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 더 큰 가치를 공급하는 그야말로 가치사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혼란스러워 판단이 안 설 때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적용할 기본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 기존 판도를 바꾸려 할 때는 그런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또,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새 주장이 그 일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업인 방송이 궁극적으로 시청자와 사회를 위한 공익 서비스라는 점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철 지난 기술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기술이 방송을 구

성하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방송기술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꼽으려면 현실성과 공익성을 꼽고자 한다.

먼저, 현실성은 현실 또는 현장을 소홀히 한 미래 청사진이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상식을 되새기자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오늘의 방통융합의 청사진을 그린 주역들은 주로 학자와 통신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었겠지만 방송계의 현장과 방송 산업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시청자의 요구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린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유발효과 얼마, 유비쿼터스의 양방향서비스, 엄청난 채널수 등의 화려한 소재로 환상의 미래를 그린 것은 아닌지 자주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 산업유발효과 얼마라는 주장을 보자. 방송광고의 시장 규모, 가입자 유치에 위해 케이블TV와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IPTV의 앞날, 돈을 들여 붓는다고 대박 방송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 방송현장만 보아도 돈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뉴스코포레이션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던가.

다른 하나의 원칙인 공익성은 우리 방송기술이 시청자와 사회의 공익에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통융합 시대에 맞추어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최근의 갈등에서 두 논리의 축은 방송의 공익논리와 산업논리였다. 방송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통융합이 되어 채널이 무한대라고 한다. 방송시장에 자유경쟁원리를 적용해야 방송산업이 살아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으니, 방통경계는 물론 미디어 산업 전체를 툭 터서 판을 다시 짜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주장의 비현실성 문제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송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익을 크게 해칠 가능성은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방송계에서는 특히 지상파에서는 공익성이 우선이다. 돈벌이를 하다가 시청자나 사회의 공익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덜 벌더라도 삼가려는 것이 불변의 가치이다.

게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의 저변에는 판을 다시 짬으로서 정치적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세력들도 있다. 정치에 관련한 방송기술인들은 기술의 중립성을 견지하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익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말이다.

큰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며 진행되고 있는 방통융합의 지각변동이 어떤 지형도를 만들지 자주 불안한 예감이 든다. 생각을 정리해 볼 시간이다. 2009년 방송기술인들은 이 이슈의 엄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차분히 기본적인 것부터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